

광주 AI중심도시 조성·전남 국립의대 설립 탄력

기대감 높아진 지역 현안사업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호남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호남미래를 견인할 '광주 AI중심도시 조성', '국립의대 설립'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실현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군공항 이전=이 대통령은 광주지역 집중유세에서 '광주 AI중심도시 조성'과 '국가수도 광주공항 이전' 2가지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GPU 5만장 구매 공약 중 많은 부분을 광주에 투입 하겠다고 강조한만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소망이다.

또 광주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 즉시 국가 차원의 이전을 약속했다.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가 지원', '대통령 직접 책임 하의 갈등 조정', '무안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의 3원칙이 언제 지켜질지가 관심이다.

광주시가 집중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도시 조성', '아시아문화도시 3.0시대 추진', '영산강 광주권 수변활력도시 조성',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 구축',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도 이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가 초고자기장 연구인프라는 한국의 자기장을 활용한 '조정밀 현미경'으로, 반도체, 양자컴퓨터, 신약 개발 등 미래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시설을 말한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만 보유한 전략적 연구 시설로 연구인프라가 설치되면 세계 5번째 초고자

국가 주도 광주공항 이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석화·철강산업 경쟁력 회복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도약 등

굵직한 현안들 공약 실현 관심

가장 연구소 보유로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지자체별로 약속한 공약도 현실화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동구 핵심공약은 문화예술 치유의 정원(H-파크)를 광주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구는 마북동 단야고 부지를 활용해 국제문화·교육지구와 친환경 스포츠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구에서는 '국립 모빌리티 파크' 조성과 AI 산업 국가시범 도시 조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및 관문 도로 교통인프라 확충, 예술교육 기관 이전·문화시설 유치, 본촌 산단 이전 및 공공·첨단 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달빛내륙철도 조속 추진 및 광주선 단계적 지하화 방안 모색 등이 지역민들의 숙원이다.

◇국립의대 설립·산업 대전환·신재생에너지 중점 도시=이 대통령 당선으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민들은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그동안 통합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두 대학(목포·순천대)을 설득해 냈고 현재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첫번째 공약으로 의과



3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대학 설립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동·서부권 화합의 출발점인 국립의대 설립은 가장 먼저 추진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의 산업기반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이 지역 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0%이지만 최근 두 산업은 글로벌 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뒤처져 있어 사업 대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예코산단 조성,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단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최근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

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수 석화산업과 철강 등 기반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만큼,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 및 경쟁력 회복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일자리가 없고 고령화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정주기반 확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시스템도 전남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주민참여 공약형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시범 실시로 전남을 신재생에너지 산업

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와 해남 '솔라시도 글로벌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현실화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 상태다. 아울러 열악한 전남의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나아가 남부권의 거점 공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민주 대선 승리, 지방선거서도 유리할 듯

내년 지방선거 영향 관심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끝이 난 제21대 대선 결과가 내년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유권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기회로 보고 있어 전통적인 보수, 진보 경합 지역에서의 민주당 우세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일보 등 전국 각 지역 대표신문 9개사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4~25일 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1.8%p)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7%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35.2%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전체의 86.9%가 이번 대선이 차기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 43.6%는 그 영향이 정권

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우세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유권자 대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되며,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경기와 부산, 강원, 제주 등 과거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 간 경합을 보였던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온다. 다만, 대선 후보를 배출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를 낼 경우 그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고, 각 정당이 어떤 후보를 낼지도 지방선거 승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다만 민주당이라고 해서 유권자를 설득 시킬만한 후보가 아니라면 무조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협-에이스리서치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위기의 국힘, 친윤-비윤 책임론 속 치열한 권력다툼 가능성

보수발 정계개편 소용돌이 치나

보수 결집 실패에 당 존립 위협

재창당 준하는 외풍 겪을 수도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함으로써 '보수발(發) 정계개편'이 불가피해졌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조유의 사태 속에서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에 실패한 만큼, 책임론과 함께 재창당에 준하는 외풍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운동기간 막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투입하는 등 보수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당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이승만=하야' '박정희=안살' '전두환·노태우=실형' '이명박=실형' '박근혜=탄핵' '윤석열=탄핵' 등 실패한 보수 정권의 역사도 지적되면서 당을 재건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심

각한 권력투쟁과 정계개편의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대선에 승리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당의 권력을 차지했던 '친윤석열' 세력의 몰락에 따라 이번 대선 이후 사실상 당권 이전 작업은 시작된 셈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 재창당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친윤 세력과 '비윤석열' 세력간 권력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실제, 대선 전날이었던 지난 2일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탄핵 반대는 정당의 뿌리"라고 주장하자, 배현진 의원이 "그냥 자통당으로 가시라"라며 갈등을 빚었다.

이 같은 친윤과 비윤의 갈등 속에서 친윤 세력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대선 참패의 책임을 친윤 진영이 지고 당권력에서 멀어진 뒤 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김문수·홍준표·한동훈·안철수·나경원 등을 중심으로 한 당권 투쟁도 사실상 시작됐다. 이번 국민의힘 대권주자 경선을 사실상 당권 투쟁으로 보는 분석도 많았던 만큼, 대선 이후에도 이들의 당권 투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 주변으로 몰려든 당내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김문수는 변방의 정치인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거머쥔 당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반면, 대선 패배의 책임 속에서 김문수에게 집중됐던 힘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면서 당권 투쟁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경선 패배 이후 한국을 떠난 홍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당권 도전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권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간의 이합집산 속에서 몸집이 커지는 차기 당권 주자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수의 새로운 길을 선언한 뒤 재창당하는 시나리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대선이 '내란 심판' 성격이 강했다는 지적 속에서 재창당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수 진영 단일화를 거절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0% 미만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정치생명을 크게 위협받게 됐다. 이 후보의 '독자 완주'가 보수 진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10%미만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별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